

# “긍정적 경제지표 늘어… 타다, 사회적 타협기구 필요”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北美간 톱다운 대화의지 유효 3050클럽 중 韓 경제성장 2위”

북미간 비핵화 교착국면이 장기화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낙관론’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이른바 북미간 하노이 노딜 후 비핵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친서가 북한에 전달되는 등 ‘북미간 톱다운 대화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현재 비핵화 국면 관련) 남북미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간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많았지만 북한은 시한 넘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에 나서서 비핵화 대화 동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능하다.

### ◆경제반등 의지 다진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 ‘올해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타다 등 혁신산업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존 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끌어갈 것임을 강조한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고 운을 뗐 후 “그러나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 신년사에 긍정적인 지표를 더 많이 말했을 수는 있다.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경제의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적인 지표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과거 우리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 중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 그리고 올해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 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에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

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삶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서비스 이해관계’와 관련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해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규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통해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

장하면서, 또 타다 같이 새롭고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가장 먼저 앞장서야’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 때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된다.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며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주어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결부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치 말아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與 “진솔한 자리” 野 “대국민 선전포고”

文 대통령, 신년회견 與野 반응

민주당 “신년정국 구상 소상히 알려” 한국당 “국정 자화자찬… 반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극적인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은 “진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은 “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생 도약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년 정국

구상을 국민께 좀 더 소상히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며 “확신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깊게 공감한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에 걸쳐 문답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 대변인은 “담대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통합, 규제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 대책, 정치, 외교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대화가 이뤄졌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

를 위한 국정운영 과제를 빠짐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전히 국정 자화자찬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는 이벤트(행사)였다”며 “사법부까지 전부 틀어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움켜쥐고 지금과 같은 폭정을 계속 자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사법장악에 대한 지적에는 (문 대통령이) 동문서답에 측근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을 보내 자

행한 검찰학살을 개혁이라 말하는가 하면, 속보이는 작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박수갈채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앞서 보수권을 제외한 ‘4+1(민주당·시) 협의체’는 전날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빛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의 고초는 마음 아프고, 경악하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우습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스팸 빅데이터’ 개방 보이스포싱 막는다

방통위, 관련 기관과 협력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포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 증거에 대응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통위는 최근 문자·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2016년 712만 건 → 2019년 1564만 건)했으며,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그동안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그동안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되어온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 인재영입 나선 與… 보수당 통합나선 野

정치권 ‘총선체제’ 돌입

민주당, 이소영 변호사 영입 역통위, 신당창당 방향 등 모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은 지역구의 석 확보와 청년 인재영입에 몰두하고 있고, 야권에선 보수통합 시동을 걸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갖고 올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 접어들었고, 첫 관문이 총선”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서 10석 가까이 양호한 쉼이니 지역

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4월 15일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과 공약 마련, 민심 포섭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공천관리위 회의 후 총선 여덟 번째 인재로 환경·기후·에너지 분야 이소영(34)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년·여성에게 방점을 찍고 연이어 인재를 발표하면서 총선 대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본격적인 국정 활동 시작으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입당도 본궤도에 오른 상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소영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민주당은 현재 이 전 총리 활용법을 고심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이 전 총리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적 민심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수권에선 통합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의 ‘비례0당’ 등 명칭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수포로 돌아간 후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석대성 기자